

李 “핵추진잠수함, 한반도 평화·안보 책임지겠다는 의지”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개최
2030년 핵잠 진수하고 해군 배치
AI·무인전투체계 군대 전환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핵잠)을 진수한 뒤 해군에 본격 배치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26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스스로 지키는 힘,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이라는 슬로건 하에 국방·안보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전방위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력 건설에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첫 번째 안건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 계획 발표를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추진잠수함 관련 합의를 이끌어낸 후, 지난 7개월 동안 국방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완성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보고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에는 핵추진잠수함 획득과 운용을 위한 추진 원칙, 국제사회에 대한 핵 비확산 의무 이행 약속,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 의지와 국가산업 발전 구상 등이 포함됐다.

또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핵추진

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 해군에 배치하는 ‘국가전략사업 정보 N 프로젝트(Next Generation, Nuclear-powered, Neo technology)’가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의 평화·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라며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 안건으로 확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우리 군 주도의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병력지원 급감 등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회복과 AI·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전작권 회복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됐고, AI·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변화된 전쟁양상과 우리 군의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 군대로의 전환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 전 시작전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겠나”라며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는, 즉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완성된 국가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현대전 양상도 급변하고 있다”

며 “단순한 병력 숫자 우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에는 우리의 기술과 무장력이 핵심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도 이에 발맞춰서 국방 전환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미래전에서 언제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미래국방전략위는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대한민국 국방의 내일을 직접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전문성과 창의성이 정부 실행력과 결합될 때 더 큰 시너지를 내게 될 것”이라며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논의되는 내용을 각별하게 챙기고 관련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 대통령을 비롯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관계부처 장관, 각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잠수함 현역·예비역 승조원, 조선 및 원자력 업계 관계자, 해군사관학교 생도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국힘 지원 나선 박근혜… 보수 표심 흔들까

9년 만에 정치 광풍 행보
여권 “영향 제한적”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9년 만에 정치 행보에 나섰다.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이 보수 결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여권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대구 칠성시장에서 찾은 것으로 정치 행보를 재개한 뒤, 25일엔 충청권을 찾아 국민의힘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전성인 옥천군수 후보 등과 지역 유세 현장을 찾았다. 또 27일엔 부산·울산

·경남 지역을, 28일에는 강원 지역을 찾아 보수 유권자 투표 독려에 나선다.

정치적 고향이자 현 거주지인 대구·경북(TK)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방문하면서 광풍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전면 등판은 지난 2017년 국정 농단 사태로 탄핵당한 이후 9년 만이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이 TK 외 다른 지역을 도는 것을 두고 사실상 ‘선대위원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대선·총선 등 다른 전국단위 선거보다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 경우 각 당은 고령 지지층만 투표장에 끌어들여는 전략을 쓴다. ‘집토끼’가 더 많이 나오는 쪽이 이기는 게 지방선거라는 의미다. 현재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굳건하지

않은 데다 ‘윤여계인’ 논란 등까지 있기에 지지층 결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당 대표에 버금가는 인지도가 있는 이들이 선거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여러 광역단체장 후보 캠프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한 것도 비슷한 이유라는 것이다. 이에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은 현 지도부에 비판적인 보수층 표심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온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고, 탄핵을 당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역할결집을 유도할 것인란 의견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충남 공주시 산성시장을 찾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등판에 대해 “국민의힘에 마땅한 리더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선거에 큰 반향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대변인은 추미에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와 관련해 “국정농단 주인공으로 평생 국민에게 사회해도 모자라는데 선거판을 돌아다니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공유하는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민주 “철근 누락 책임” v 국힘 “정원오 의혹” 맞붙

행안위서 서울시장 선거 대리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서울시장 선거’ 대리전의 양상으로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대한 책임론을 펼쳤고, 국민의힘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주폭해 외출장 등을 중심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26일 여야는 행안위 질의 시작 전부터 각 후보를 비난하는 피켓 부착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에 행안위원장인 권철승 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국민의힘 위원들이 피켓을 떼면서 회의가 재개됐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무단 설계 변경, 부실시공, 과하중, 감리 부실”을 거론하며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삼성역 철근 누락 사

태와 너무 유사하다”고 했다. 그는 “제2의 삼풍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나”라며 “서울시 책임”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대안을 같이 만드는 게 상식”이라며 “뻔뻔하게도 서울시는 그것을 안 해놓고도 이제 와 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원오 후보의 주취 폭행 사건과 야기씨당 기부채납 의혹, 칸쿤 출장 등을 거론하며 맞섰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 주취 폭행 사건과 관련, “(당시 정 후보가) 술에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5·18 관련 시비가 붙어 시민과 경찰을 폭행했다’고 이야기한다”며 “기억이 안 난다

는 사람이 왜 5·18 관련 이야기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당시 ‘하기씨 굿당’이라는 무속 시설을 아파트 조합이 지었는데, 성동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다가 안 받아서 준공이 지연되고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무속 시설을 구청이 기부채납한다는 건 상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의 (구청장 시절) 출장 보고서를 보면 칸쿤 일정에만 관련해 아무런 구체적 세부 내역이 없다”며 “다른 일정에 있어서는 사진도 있고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칸쿤에서는 뭘 했는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각 후보를 향한 행안위 출석 요구도 나왔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정원오·오세훈 후보, 선거 일정 중단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 방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26일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공사 사고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정원오 후보 캠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후보가 선거 운동을 잠정 중단한다”며 “사고 수습이 최우선으로, 즉시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후보 캠프도 공지를 내고 “오후 보는 사태 파악 및 대응을 위해 이 시간 이후 금일 유세 일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했다.

두 후보는 사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관계 당국의 신속

한 구호 조치를 촉구했다.

정원오 후보는 자신의 SNS에 “지금은 무엇보다 빠른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며 “관계 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고, 구조와 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썼다.

오세훈 후보도 SNS에 “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구호 조치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적었다. 이어 “현장 작업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며 사태가 온전히 수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수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32분쯤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